

4월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- 편집자 주 -

■ '09. 7월 보육료 전액지원(무상보육)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 및 집중신청 실시(4.6~5.8)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「'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.
 - '09년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%까지 보육료(정부지원단가) 전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위별 기준소득을 산출하고,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복잡한 소득·재산조사를 간소화·합리화하였다.
- '09년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별 보육료 차등지원
 - 그동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, '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.
 - 즉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%까지는 보육료(정부지원단가) 전액을 지원받고, 소득하위 50~70%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.
 - 기준소득은 건강보험공단 DB 영유아가구(200만가구)의 소득·재산자료를 분석하여,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%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, 소득하위 60%는 339만원, 소득하위 70%는 436만원으로 결정되었다.
-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(4월 6일~5월 8일) 운영
 - '09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4월6일~5월8일까지 한달 동안 '보육료 집중 신청기간'을 운영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아,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%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부모님은 보육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, 각종 증빙서류 제출의 수고가 덜어지게 되며, 지자체 담당자는 공적자료 사용으로 소득·재산조사가 간편해지며, 민원부담도 한결 덜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액 4,000원 인상 지급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매달 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4월부터는 최고 88,000원(부부수급자 140,800원*)까지 4,000원 인상해 지급한다.
 - * 부부수급자의 경우 단독수급액에서 20% 감액 지급(140,800=88,000×0.8×2)
 - 다만,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받는 총액(기초노령연금액+기초생계비)은 변동이 없다.
 - 기초노령연금액(A값의 5%)은 「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(A값)」에 연동되어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.
 - 이번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으로 매달 124억원, 올해 말까지 약 1,100억원의 급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348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(수급율 68%)하였으며, 이는 2월에 비해 6만명이 증가한 수치로 올해 중에 전체 노인인구의 70%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5월 1일부터 i-사랑카드(보육전자바우처) 1차 시범사업 실시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오는 9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i-사랑카드(보육전자바우처) 사업에 앞서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서울 광진구와 부산 사상구, 강원도 횡성군 등 3개 지역 어린이집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.
 - * i-사랑카드: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이용권(전자바우처) 형태로 부모에게 지원하여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에 보육료(정부지원금+부모부담금)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임.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시군구에 매월 정부지원보육료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식임.
- 이번 1차 시범사업에는 3개 시·군·구 지역의 370개의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13,318명의 아동이 적용 대상이 된다.
 - i-사랑포털(www.childcare.go.kr: 부모지원 시스템)을 구축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접근성

이 강화된다. 특히,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어린이집 찾기는 디지털맵을 활용한 맞춤형 검색 기능이 제공된다. 함께 나누는 이야기방은 부모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보 공유하는 장으로 제공된다.

- 또한, 기존 표준보육행정시스템(e-보육)에서 이루어졌던 어린이집 운영관련 모든 업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(cpms.childcare.go.kr)으로 확대 개편되며, 아이사랑포털(부모지원시스템)에 어린이집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.
 - * i-사랑카드 사업관련 궁금한 사항은
 - i-사랑카드 헬프데스크: 1566-0233
 -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: (국번없이) 129
 - 신한카드 관련문의(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): 1544-8868

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

-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『2008년 장애인실태조사』 결과 2005년에 비해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다소 개선되었으나, 비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.
 - 특히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경우 1,819천원으로 전국 가구소득(3,370천원)의 54.0%에 불과하며 2005년 53.8%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
 - 절대적 수준에서는 2005년도의 1,572천원에서 2008년에는 1,819천원으로 개선되었다.
 -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은 8.3%로써 전국 실업률 3.3%의 약 2.5배에 해당되나, 2005년 장애인의 실업률 10.6%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.
 -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58.7천원으로 2005년 155.4천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.
 - 장애인 차량소유 비율은 49.3%로 2005년 48.9%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(30.1%), 소득보장(21.9%), 주거보장(15.4%)으로 2005년(소득보장(48.9%), 의료보장(19.0%), 주택보장(4.0%))에 비해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 - 여성장애인들은 가사도우미(17.6%), 출산비용 지원(14.8%), 자녀양육지원서비스(13.6%)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.
-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 “장애인의 취업수준은 3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, 장애인이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평가하였으며,

- “향후 기초장애연금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장애유형별 개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확대로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계 및 관련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,
 - 국회 및 각 정부 부처 등에 배포하여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.

2008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

- 보건복지가족부(국민건강보험공단)는 2008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.
 -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,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전년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, 그 정산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 시,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.
 - ※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, 임금 등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됨.
- 2008년도분 정산 결과, 건강보험은 지난해보다 214억원 늘어난 11,164억원(997만명)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고, '08.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81억원(997만명)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.
 - ※ 건강보험 정산결과: 추가징수 13,122억원(635만명), 반환 1,958억원(188만명)
 - ※ 노인요양 정산결과: 추가징수 240억원(579만명), 반환 59억원(216만명)
 - ※ 1인당 평균정산 금액: 건강보험 111,892원, 요양보험 1,816원
-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“보수 월액 변경 제도”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특별 안내기간(5월, 9월)을 운영할 계획이다.
 - 가입자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면 즉시 반영하여 낮아진 보험료로 고지토록 할 계획이다.

독거노인의 새로운 가족 u-Care 서비스

-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“독거노인 u-Care시스템”이 독거노인 보호와 응급구호에 성과를 보임에 따라 올해 더욱 확대보급하기로 했다.
 - 이와 관련,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동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4월 7일(화) 15:00 보건복지가족부에서 “독거노인 u-Care 시스템” 완료 보고 및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는다.
- 독거노인 u-Care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 등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, 출입, 가스유출,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를 집안에 설치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서비스로,
 - '08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간 경기 성남시, 충남 부여군, 전북 순창군 등 3개 지역 65세 이상 독거노인 5,550명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.
- “독거노인 u-Care시스템”은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서비스와 응급구조 서비스를 병행하여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.
 - 집안에 설치된 활동량감지센서와 출입감지센서의 정보를 분석해, 독거노인의 활동량이 없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생활관리사가 전화로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.
 - 독거노인이 응급호출을 요청하거나 집안에 설치된 화재 또는 가스유출 감지 센서가 작동하면 관할 소방서(119)로 자동으로 신고되어 소방서에서 응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.

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, 성과중심으로 전환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확대 및 자활사업 추진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「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」을 실시한다.
 - 4월 중순부터 경기, 부산지역에서 본격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활사업의 예산지원방식을 기존의 지역자활센터(242개소)에 대한 일률적인 기관운영비 지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및 탈수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.

◇ 시범사업 개요

- 대 상 자: 수급자 · 차상위계층 최대 2천명(지역별 1천명, 연간 누계기준)
- 사업지역: 부산광역시, 경기도
- 사업기간: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갱신절차를 거쳐 최대 3년간 사업 가능

◇ 예산지원방식

- 1인당 서비스비용을 산정하여 지원액의 일부를 선지급한 후, 사업실적에 따라 나머지 지원액 지원(Outcome funding)

구분 (연간)	기본급	성과급		
		취업(창업)	6개월 이상 지속시	(수급자)탈수급 (차상위자)소득규모*
1인당 지원액 (최대 430만원)	150만원	85만원	85만원	110만원

*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%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 · 창업을 한 경우

■■■ 사회복지분야 부정 · 비리 근절에 발 벗고 나선다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사회복지분야의 부정 ·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 감사관실에 『사회복지 부정 · 비리 신고센터』를 설치 · 운영한다.
- 신고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위법 ·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,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 및 수당을 횡령하는 경우, 수급 부적격자가 허위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등으로,
-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의 신고창구나 전용 신고전화(☎ 02-2023-7778)에 신고하면 된다.

■■■ 실직 후 1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력 유지

-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범위 확대와 건강보험진료비 상한액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

-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6일자로 공포 · 시행한다.
- 먼저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.
 -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총 보험료(사용자 부담분 포함)의 50%만 납부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,
 - 이를 개선하여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실직한 자로 그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였다.
 - ※ 임의계속가입제도: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, 실직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,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.
 - 아울러,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대폭 경감한다.
 - 6개월 200만원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00~400만원으로 차등화하였다.
 - 이에 따라,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.

■■■ 의료급여,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처방 허용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에서 의사(촉탁의)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.
 - ※ 의료급여 : 국민의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
- 사회복지시설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내에 의사(촉탁의)를 반드시 두도록 하여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,
 -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 및 투약비가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.
 - 이로 인해 상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,
 -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한 것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편법 청구하여 현지

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마찰이 발생했다.

-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처방을 허용하고,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다만, 금번 고시개정 취지가 정신요양시설·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에 있는 만큼,
 -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수급권자에 한해서 처방이 가능하고, 처방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이외의 행위(예, 물리치료 등)는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.
 - 따라서, 의사가 복지관·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부황·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.
-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통해 시설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인터넷으로 자원봉사 일감 찾자!

- 보건복지가족부-(주)NHN-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네티즌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자원봉사 온-오프라인 연계 시스템(네이버 해피빈)이 4월 6일부터 개통된다.
-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2월 10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인증시스템(VMS)과 (주)NHN이 운영하는 Naver 해피빈(happy bean)의 전산망을 연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.
- 자원봉사를 원하는 네티즌은 앞으로 네이버 해피빈에 접속해 자신의 전문성·특성에 맞는 지역별·분야별(8개) 봉사일감을 손쉽게 찾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.
- 각 지역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센터(5,200여개소)의 인증요원(1만 3천여명)들은 해피빈에서 활동하면서 네티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, 적절한 봉사일감을 제공·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.
 - ※ 자원봉사 분야: 노력, 교육, 재능, 상담, 의료, 문화, 공익활동, 행정업무
 - ※ 네이버 해피빈: <http://happybean.naver.com>

일당정액형 新포괄수가 시범사업 실시

- 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4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수술 등 20개 질병군에 대해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.
- 이번에 실시되는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, 지난 20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되어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하는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.
 - ※ 7개 질병군: 수정체수술, 편도선수술, 항문수술, 탈장수술, 충수절제술(맹장수술), 자궁수술, 제왕절개분만
 - ※ 행위별수가제: 현행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주된 방식으로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일정한 가격을 정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. 의료의 질 향상에는 적합하나, 가능한 많은 환자에게 많은 양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의료 이용량의 적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
 - ※ 포괄수가제: 맹장수술 등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군에 대해서 평균적 비용을 지불하는 진료건당 보상방식으로, 진료량을 적정화해 의료자원을 효율적 활용하고 국민 의료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
- 일산병원에 적용되는 신포괄수가 모형은 환자재원일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산정에 재원일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였으며, 10만원 미만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적용하되, 10만원 이상 수술 행위료,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별도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지불정확도를 높였다.
- 또한, 10만원 미만 비급여(임의비급여 포함) 항목을 포괄수가에 포함하였고,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재정중립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비율이 28.1%로 인상되어야 하나 각 질병군별 평균 재원일수까지는 환자본인부담률을 20%만 적용하도록 하고, 각 질병군별 평균재원일수 이후는 본인부담률을 23%로 증가시켜, 환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면서, 환자에게 5~8% 정도의 진료비 감면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였다.
- 복지부는 신포괄수가 모형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수가 모형을 개선·보완한 후 시범사업 질병군 대상을 확대하고,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.